

「 2019년 1월 19일 시행 」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B

【인문사회계열 : 필수과목】

제 1 과목	제 2 과목	제 3 과목
헌 법	한 국 사	행 정 법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문제 책형”을 확인하고,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의 책형란에 “시험지 책형”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문제풀이 바랍니다.
4.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헌 법 】

1.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등록 및 공개
- ②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 ③ 청렴의 의무
- ④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 ③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이상 자치권의 본질을 다소 훼손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산에 관해서는 그것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와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특수의결주의(예산비법률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 ④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의 목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4.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독과점 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회복에 있으므로 독과점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③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④ 어떠한 경우에도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5.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③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금지하고 있다.
- ④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민사상·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
-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6.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사면·감형과 복권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고, 원칙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③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⑤ 사면·감형·복권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8.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은?

- ① 우호통상항해조약
- ② 선전포고
- ③ 비상계엄의 선포
- ④ 국군의 해외 파병
- 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9.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②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정당해산의 제소
- ④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에 대한 심사
-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10. 예산에 대한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④ 헌법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없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2. <보기>의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보 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 ① 제헌헌법(1948년 헌법)
- ② 제1차 개정헌법(1952년 헌법)
- ③ 제2차 개정헌법(1954년 헌법)
- ④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
-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

13. 근로의 권리에 관한 <보기>의 헌법규정 중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넣은 것은?

—<보 기>—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가)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다)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 가 | 나 | 다 |
|--------|------|---------|
| ① 최저임금 | 법치주의 | 인간의 존엄성 |
| ② 최저임금 | 민주주의 | 평등원칙 |
| ③ 적정임금 | 법치주의 | 평등원칙 |
| ④ 적정임금 | 법치주의 | 인간의 존엄성 |
| ⑤ 적정임금 | 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성 |

14. 대법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④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5.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②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③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현행 법률에 한정되며,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 확인에서 침해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은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은 청구인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16.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 ②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 ③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야지,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 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7. <보기>의 헌법재판 중 헌법재판소법에 청구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심판만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헌법소원심판	ㄴ. 위헌법률심판
ㄷ. 권한쟁의심판	ㄹ. 정당해산심판
ㅁ. 탄핵심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ㄷ, ㅁ ⑤ ㄹ, ㅁ

18. 헌법상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된 공무원은?

- ① 국회의장
- ② 검사
- ③ 법관
- ④ 경찰청장
- ⑤ 검찰총장

19.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청구권이 곧바로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중 제98조를 준용하는 부분 가운데 ‘소취하간주’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 ④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⑤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인데, 그 의미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하며 국회본회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헌법은 국정조사권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입법권의 보조권한으로서 당연히 인정된다.
- ④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수단으로서 사법부에는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⑤ 국정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고, 국정조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1.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국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국회에 청원을 할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
-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2. 헌법상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약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다.
- ② 모든 조약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안에 대해서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렇지 않다.
- ④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 ⑤ 조약의 체결·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비준하는 경우,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23.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긴급명령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24.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 ② 법률에 대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없으나, 오직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

25. 정치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으나, 누가 정당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즉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②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법률조항은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 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
- ③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 ④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법률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 ⑤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사 】

1. 다음 건의를 수용하여 당시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제7조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해야 합니다.
- 최승로, 「시무 28조」 -

- ①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② 5경 15부 62주를 설치하였다.
- ③ 9주 5소경 체제로 지방을 정비하였다.
- ④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⑤ 전국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심문자: 작년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그때 고부 군수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심문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였느냐?
전봉준: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나?
전봉준: (가)

- ① 을사조약으로 인해 국가의 위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②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는 단발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 ③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 ④ 토지 수탈을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세웠기 때문이다.
- ⑤ 삼정이정청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가) 인물의 집권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이가 집권한 후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咫尺)을 삼켰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라고 하였다.
- 황현, 『매천야록』 -

- ①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 ②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 ③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 ⑤ 일본이 요청한 서계 수리를 거부하였다.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가) (이)라는 자들의 등급은 하나가 아니다. 비록 공이 많고 벼슬을 많이 지낸 집안 후손은 아니더라도 상하와 내외의 구별이 있는 자가 있고, 상하·내외의 구별을 하지 않아 대대로 상민이 되는 자가 있으며, 몸은 천인이 아니나 천인과 닮이 없는 자도 있다.
- 『세종실록』 -

- ① 범제적인 신분이었다.
- ② 일천즉천이 적용되었다.
- ③ 과거 응시가 가능하였다.
- ④ 조세와 국역의 의무가 있었다.
- ⑤ 양반·중인·상민으로 분화되었다.

5.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한 갈래이다.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계루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을 거점으로 성곽을 쌓고 거주하였다. 대조영은 용감하고 병사를 잘 다루었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귀부하였다.

-『구당서』-

- ①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제작하였다.
- ② 유기·신집 등의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 ③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리를 채용하였다.
- ④ 주자감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⑤ 왕인이 왜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래하였다.

6. 다음 사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별읍(別邑)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하여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② 해마다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③ 세력의 크기에 따라 신지·읍차 등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다.
- ④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회의를 열어 사형에 처했다.
- ⑤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저가·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7. 다음 작품이 저술된 시기의 문예 경향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듯한 선비가 있으니 그의 호는 북곽 선생이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1만 권이며, 경전의 뜻을 설명하여 엮은 책이 1만 5천 권이었다. …(중략)…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과부가 살았는데 수절하는 과부였으나 아들 다섯의 성이 각기 달랐다. 어느 날 밤 둘이 같은 방에 있으니 그 아들들은 어진 북곽 선생이 밤에 과부를 찾아올 일이 없으니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 여기고 잡으려 하였다. 북곽 선생이 놀라 도망치다가 별판의 거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 박지원, 「호질」 -

- ① 창가가 유행하였다.
- ②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 ③ 상감 청자가 발달하였다.
- ④ 무용총에 벽화가 그려졌다.
- 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세워졌다.

8.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일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중략)… 반란 괴수 흠돌·흥원·진공 등은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제 마음대로 위세를 부렸다. 흉악한 무리를 끌어 모으고 궁중 내시들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삼국사기』-

- ①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②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 ③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④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9. (가), (나)에서 밑줄 친 두 사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는 요동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당 태종은 직접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해 왔지만, <u>고구려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 군을 격파하였다.</u>
(나)	고구려는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을 많이 소모했을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이 사망한 후 지배층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u>나·당 연합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다.</u>

- ①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이 성립되었다.
- ②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의 대군에 승리하였다.
- ③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 ④ 왜는 백제 부흥군 지원을 위해 백강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 ⑤ 백제는 남으로 마한을 통합하고 북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10.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의 왕 <u>(가)</u>이/가 …(중략)… 관산성(충북 옥천)을 공격하였다. • <u>(가)</u> 32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충북 옥천 부근)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북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난병들에게 살해되었다. <p style="text-align: right;">- 『삼국사기』 -</p>
--

- 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②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11.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나라에서 경인·계사년 이후로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겠는가?” 여러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 『고려사』 -

918년	1019년	1126년	1170년	1270년	1392년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귀주 대첩	이자겸의 난	무신 정변	개경 환도	조선 건국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12.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목종 5년 7월, 왕이 다음과 같이 하교하였다. “…(중략)… 농사에 힘쓰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철전 통용의 길을 막으려 한다. 차(茶)나 술, 음식 등을 파는 각종 상점들에서 매매하는 데는 이전과 같이 돈을 쓰게 하고 그 이외에 백성들이 자기네 끼리 매매하는 데는 토산물을 마음대로 쓰도록 할 것이다.”

- 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③ 호포제에 따라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 ④ 대동법을 시행하여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 ⑤ 소(所)의 주민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여 공물로 바쳤다.

13. 다음 주장을 전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한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 「정혜결사문」 -

• 정은 본체이고 혜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 「보조국사법어」 -

- 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기록을 남겼다.
- ② 아미타 신앙을 통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 ③ 수행과 노동을 중시하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④ 천태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 ⑤ 통감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려 하였다.

14. 밑줄 친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녹(祿)을 먹지 않았던가? 녹을 먹으면서 배반하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명분으로는 상왕을 복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니 성삼문이 말하기를 “상왕이 계시거늘 나리께서 어찌 저를 신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리의 녹을 먹지 않았으니,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저의 가산을 몰수하여 헤아려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 남효온, 『추강집』 -

- ①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 ②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③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④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 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15.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사초로 제출한 것을 구실로 일어났다.
(나) 을사사화는 왕위 계승 과정에 외척 세력이 간여하면서 일어났다.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이기·윤원형 등이 윤임·유관 등을 탄핵하였다.

- 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 ②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 ③ 진경 산수화가 등장하였다.
- ④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⑤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하였다.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외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예의의 나라인 삼한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통분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사직에 죄를 얻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죄악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조종조의 천위(天位)를 누리고 종묘사직의 신령을 받들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 ① 박제가가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 ②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였다.
- ③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 일어났다.
- ④ 청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하였다.
- ⑤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에 항복하였다.

1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세금과 지대를 화폐로 낼 수 있게 되자, 동전의 유통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누구나 상평통보를 이용해 물품을 사고팔 수 있었다. 하지만 지주나 대상인이 재산 축적과 고리대에 동전을 이용하면서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 동전이 크게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① 분청사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 ② 판소리와 사설시조가 유행하였다.
- ③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전이 발생하였다.
- ④ 사족들이 세운 서원과 사우가 급증하였다.
- ⑤ 건강과 장수 등을 기원하는 민화가 유행하였다.

18. 다음 개혁 정강을 발표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문벌을 폐지함으로써 인민의 평등한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들을 재능에 따라 등용하며 관료으로써 등용하지 말 것.
 3. 전국에 걸쳐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들의 협잡을 방지하고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 그 곤란을 제거하며 동시에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12.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다른 재무아문은 혁파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閣門)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 ① 문명 개화론을 수용하였다.
- ②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교조 신원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④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다.
- ⑤ 정의 양무 운동을 개혁의 본보기로 삼았다.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은 을미사변 이후 귀국하였다. 그는 아관파천으로 일본의 압력이 약화되자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가)을/를 발간하였다. (가)은/는 국민을 계몽하고, 자주독립과 자유 민권 사상을 전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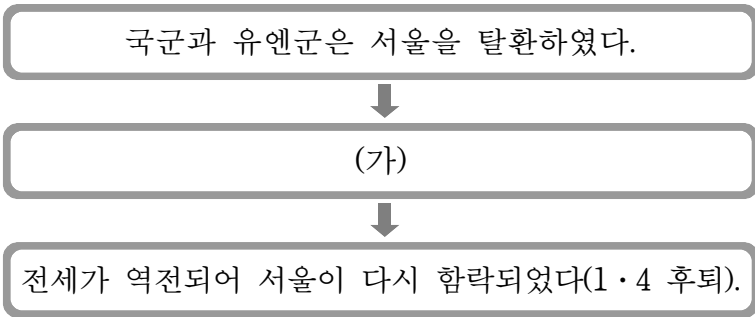
- ① 천도교의 기관지였다.
- ②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 ③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다.
- ④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소개하였다.
- ⑤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20.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덕의 타락에 신윤리가 시급하며, 문화의 쇠퇴에 신학술이 시급하며, 실업의 초취에 신모범이 시급하며, 정치의 부패에 신개혁이 시급이라. 천만 가지 일에 신(新)을 기다리지 않는 바 없도다.
 ... (중략) ...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가)이/가 원하는 바이며, (가)이/가 품어 생각하는 소이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새 나라(新國)를 건설할 뿐이다.

- ①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 ②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단체로 조직되었다.
- ③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계몽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 ⑤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다.

21.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 ②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협상이 시작되었다.
- ③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 ④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고,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 ⑤ 북한군이 경상도 일부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다.

22. 다음 ‘합의서’를 체결한 정부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중략)…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17.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남북 기본 합의서」 요약 -

- 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② 4·13 호헌 조치가 내려졌다.
- ③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
- ④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 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23.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 혹은 본령에 기초해 발표된 명령 및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 ①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 ②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 ③ 헌병 경찰 제도가 시행되었다.
- ④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 ⑤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24. 다음 내용으로 전개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 『산업계』 -

- ①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 ②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③ 순종의 인산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다.
- ④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⑤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5.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략)…
□(가)□을/를 조직하고 …(중략)…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중략)…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가) 선언 -

- ① 국내 진공 작전을 펴기로 계획하였다.
- ②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 ③ 미쓰야 협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 ④ 옌안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와 더불어 활동하였다.
- ⑤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행정 법 】

1.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을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있으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격장이나 공항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사격장이나 공항과 같은 영조물 자체에 물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⑤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설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관할 동장이 선정한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미니킵 젤리가 수입·유통되어 이를 먹던 아동이 질식사 하였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해당 전보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손해의 발생에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명, 신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 ②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
-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 의무
- ④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매점의 소유자가 점용기간 만료 후에 그 매점으로부터 퇴거할 의무
- 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

5.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법」·「농지법」 등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 ② 현행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대집행과 선택적 관계이다.
-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의무이행확보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반복할 수 있다.
- ④ 현행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고 있는 구속력·공정력·존속력·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⑤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시 고려되어야 한다.

7.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 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가능하지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 신축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해 변상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납부했던 금원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고 할 때 변상금부과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8.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도 당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9.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수용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후 그 사업이 공익성을 결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용재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제기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⑤ 보상금에 대한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은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일 뿐, 재결청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을 제외하고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10.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준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을 통해 법규성을 인정받는 것은 비례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 ② 신뢰보호원칙은 아직 명문상 원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구체적 언동의 경위들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못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⑤ 행정청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측정한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약의 취소
 - 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결정 통지
 - ㄷ. 국립대학교 학칙의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개정한 학칙개정행위
 - ㄹ.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의 고지
 - ㅁ. 공공기관 입찰의 낙찰적격 심사기준인 점수를 감점한 조치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ㅁ

12. <보기>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 ㄷ.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다투는 소송
 - ㄹ.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정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경제작용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③ 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열람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1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②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다.
-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 ④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 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5.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이 양도·양수된 후 양수인이 그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 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에 관한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③ 사실상 영업을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라면 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유무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6.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사건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면서도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④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⑤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 「건축법」상 허가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무위반자의 명단공포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 명령은 과거의 위반행위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③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이라고 하여 해당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의한 수도의 공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의 재량에 속한다.

18.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물적 일반처분으로서 도로구역변경결정은 「도로법」에 따른 절차(고시·열람)와는 별개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 ③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해명기회를 가졌더라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⑤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 ③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 ④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20.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법령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 ③ 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조례 등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에 근거한 (당시) 제주도 학원업무지침상의 관련 규정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에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고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할 때에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를 한 경우라면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22.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으로서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 ③ 주민투표의 효력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의 주민투표사무는 「주민투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⑤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23.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 ②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 ③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위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고, 동일인이 복합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책임을 지는 자보다는 복합적 책임을 지는 자가 우선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자에게 발동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비책임자)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
- ⑤ 휴대폰 가게 내의 TV에서 방영되는 월드컵 축구 시합을 보려고 모여든 군중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모인 군중에게 경찰책임이 귀속된다.

24. 공무원관계의 변경·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⑤ 징계면직이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해임을 의미한다.

25. 행정법상 권한행사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② 행정소송의 수행과 관련해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며,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수임기관이 아닌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③ 전결(專決)은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권한을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게 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